

## “광주관광공사 총체적 난국” 사업 운영·관리 부실 질타 쏟아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티투어버스 한정면허 미승인 차량 운행...랩핑도 안해  
광주투어버스 승강장 소방시설 구역 설치 과태료 대상  
관광공사 “무면허 차량 운행 재발 않도록 각별히 관리”

광주관광공사가 운행 면허 승인을 받지 못한 버스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등 사업 운영·관리 전반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질타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졌다.  
광주시의회 재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4일 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투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한정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재 의원은 “광주시투어는 광주를 찾는 관광객·시민의 관광 편의 증진과 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정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버스를 투입해 운행한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위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정면허 승인을 받은 차량 2대 중 1대는 과업요청서와 달리 랩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이라며 “시티투어 사업 전반을 확인

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광관광공사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도 제기됐다.  
재 의원은 “관광공사가 광주투어버스(DRT·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전자 유니폼이라고 제출한 사진은 해당 운수 업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촬영된 2016년 사진”이라며 “관광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의도적으로 편집하거나 업체 제출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측은 “한정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버스는 예비 차량”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버스 역시 시티투어에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귀순 의원(민주당·광산구4)은 “보안 연결이 되지 않은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어 이용객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크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투어버스 승강장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돼 승·하차가 이뤄지는 모든 차량이 과태료 부과 대



겨울나기 준비 총력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을 사흘 앞둔 4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직원들이 문흥동 제설자재 보관소에서 올 겨울 폭설 시 제설에 사용할 친환경 소금을 하역 작업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장비 사전 점검·정비에 나서고 있다. /김재리 기자

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관광공사 내 필수 인원인 미화 공무원이 21명 중 12명으로 가장 높고 2-3개월 단기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단체 협약과 관리 운영 내규 위반 사항”이라며 “최소 17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통합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질 낮은 일자리가 지속 운영되고 있다”고 안정적인 채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서임석 의원(민주당·남구1)도 “요청 자료가 없거나 부실하다면 인정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없는 자료는 허위로 만들고, 잘못 기재된 자료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되면 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행정감사 자료 중 일부는 표 안에서 각기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의 표 안에 2개의 합계를 기재해 제출하기도 했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시티투어버스는 2022년 4억원을 들여 구매한 뒤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도 못하고 차고지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관광공사는 “운송사

가 한정 면허 차량에 한해 시티투어를 운영토록 하고 무면허 차량 운행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며 “광주투어버스 운전자 유니폼의 경우 차량 운행 중인 착장 사진을 제공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운수사로부터 해당 유니폼 사진을 제공 받았다. 제출 자료와 관련해 사진 조작, 허위자료 제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선강 기자

## 민주당, ‘금투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론

이재명 대표 “現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12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

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

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반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끼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 Today

- 한동훈,尹대통령 ‘사과’ 요구 4면
- 쌀소비 촉진 향토업체를 찾아 12면
- 광주FC, 日 최강팀도 잡는다 16면

## “전남 교원 임용 1년 내 퇴직률 20.7%...전국 1위”

이재태 도의원 “특별연수 개선율”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4일 “전남 교원의 임용 1년 내 퇴직률이 20.7%로 전국 1위”라며 “전남 교원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 특별연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의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수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정 기자

이 의원은 “전남 교원의 임용 뒤 1년 내 중도 퇴직 비율이 전국 1위(90명·20.7%)”라며 “지난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 비율이 전국 5위(1천847명·2.2%)를 기록하는 등 전문성 신장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남의 경우 정책연구과정 9명, 미래교육과정 25명 등 총 34명의 교원이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에서는 총 82명의 교원이 연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 함께 연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

##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1 일 시 | '24. 11. 6.(수) ~ 11. 8.(금) 3일간  
1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송암스포츠타운)  
1 온라인 | www.regionexpo.kr